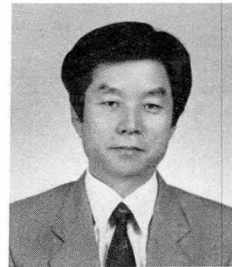


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의 국내농업정책 방향



조 일 호

(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)

1. 국내농업대책의 기본방향

- 전반적인 세계경제여건의 자유화 전환과 국내의 도·농간 균형발전의 과제에 대응한 중·장기대책 추진-

가. 고려요인

- 농어촌경제의 균형발전
- 도·농간 소득과 생활여건 격차의 개선
- 영세한 영농규모에서는 농가소득 제고에 양계내재

〈한·일간 농가소득의 비교('88)〉
(단위: 천원, %)

	한 국	일 본
○ 농 가 소 득	8,130	31,392
- 농 업 소 득	4,912	5,181
- 농 외 소 득	3,218	26,211
(농 외 소 득 비 율)	(39.6)	(83.5)

○ 농가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성장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

- 전업농가: 비농업취업자와 대등한 생산성과

소득의 향유

- 겸업농가 등: 농외취업 희망농가에는 농외취업기회 적극 부여
- 노동력이 취약한 농가: 사회정책적 복지지원 강화 등
- 국제화하는 경제여건에 알맞는 작목의 선택
- 기본적으로 기술요건이 경쟁력의 관건
- 상대적으로 토지이용적인 농업보다는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축산, 과수, 채소, 화훼, 특작류 등이 우리 여건에 유리
- 소농체제의 불리점 극복을 위한 규모화, 협동화, 시설개선 등 추진
- 농어촌발전종합대책('89), 축산장기발전대책('90),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작목개발('89~) 등 현재 수립 추진중-

나. 기본방향

○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촉진

- 농어가의 소득원 확충과 복지 증진
- 농어촌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농어촌주거 생활권의 개발

2.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착실한 추진

가. 영농규모의 적정화와 협업적인 새로운 영농조직 도입

- (1) 영농규모의 확대유도
 - 경종농업분야: 농지유동성의 제고
 - 전업농을 중심으로한 경작규모의 확대추진
 - 농지관리기금과 농어촌진흥공사 설치
 -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시행
 - 축산분야: 양축기반확충과 시설개선
 - 전업양축가의 경영규모 확대
 - 축산장기발전대책 수립추진
 - 시설원예분야:
 - 기술집약적인 부문의 시설개선 촉진
 - 과수 등 규모화와 기계화 확대
- (2) 영농조합법인 제도의 실시
 - 소농의 협업·공동영농으로 생산성 제고
 - 세제, 금융 등 영농지원 실시
- (3) 위탁영농회사 제도의 실시
 - 농작업대행, 농업경영의 위탁관리
 - 경험있는 기계화영농단 중심으로 지원

나. 농업기계화의 촉진

- (1) 현황
 - 벼농사의 기계화율: ('89) 70% 수준(보유: 1,028천대)
 - 밭작물, 과수, 원예, 축산분야의 기계화 미흡
- (2) 과제
 - 벼농사분야의 수확·건조부분 기계화
 - 축산, 원예, 전작부분의 기계화 확산
 - 공동이용 등을 통한 이용률 제고와 농가구입

부담경감

- 농기계의 부품공급과 수리 등 사후봉사 강화
- (3) 주요시책
 - 공급기종의 다양화
 - 전작, 원예, 축산분야의 새로운 기종보급
 - 농기계의 이용을 제고와 내실있는 운용지도
 - 기계화영농단의 확대와 구입부담 경감
 - 위탁영농회사 등 농작업대행 조직육성
 - 농기계 수리용 부품공급의 원활화
 - 농협의 도단위 종합부품센터 운용
 - 수리용 부품의 비축자금 지원확대
 - 농촌지도소의 농기계정비훈련 확대
 - 간단한 수리는 농민이 할 수 있게 교육

다. 전문농업인력의 육성

- 업종별, 유형별 지원체계의 다양화
- 선도적인 전문농업인의 기술과 경영능력 제고
 - 선진농업지역 해외시찰 등 실시 국제화의 대응력 제고
- 농어민후계자 지원제도의 내실화

라. 기술혁신의 촉진과 상품기술의 개발

- 유전공학 등 첨단농업기술의 개발·보급 촉진
 - 지역별 현장 애로해결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
 - 농림수산부문 특정연구 과제사업 확대실시
 - 농업기술과 경영정보 조기공급체계 개발
 - 전산정보의 관리, 농촌지도소의 전문기술 지도강화
 - 상품기술의 중점적인 개발보급

〈예〉

- 쌀: 미질개선과 지역별 특산미
- 육류: 부위별 판매와 한우고기의 고급육화

- 과채류 : 한국적 특성을 살린 비경쟁적 고급 품목화 수출의 집중개발
- 인삼, 약초 등 특산물 : 대외수출형의 특성상품화

마. 국내농산물의 가공개발 및 판촉강화

-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가공업 참여확대
-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
- 기재 가공기업과의 반가공연결 등 지원
- 가공기술개발과 제품의 품질보증제 개발
- 지역별 특성상품 개발
- 특성있는 우위품목 위주로 「내고장 으뜸상품 운동」 전개
- 농민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협조체제 강화
- 우수농산물의 비교품평회 등 실시
-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혁신과 시설현대화 지원

바. 농산물가격 지지방식의 다양화

- 시장기능 접근방식의 가격안정화사업 중점개발
- 마늘·양파 등에 대한 「생산·출하약정제」 실시
- 돼지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「자조금」제도 발전
- 직접수매방식에서 차액지원방식 활용
- GATT 11조 2의 C등 통상규범과의 조화
- 농업관측과 유통정보의 조기보급체제 개발
- 새로운 통신기술의 적극활용방안 강구
- 농산물가공자 등 실수요자와 원료생산자간의 계약생산방식 확대

사. 농외취업기회의 확충

- 농공단지의 내실화와 확대조성

- 목표 : '93년까지 350개, '89말현재 170개 지구 조성

- 대기업 등 건실한 업체의 농공지구입주 유도
- 농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 확대

- 농외취업희망 농민에 대한 기술훈련 지원과 취업알선
- 훈련비, 취업준비금 등 지원 확대
- 농어촌 내부의 자원활용을 통한 농외소득향상 지원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특산단지 확충

아. 농어촌 생활여건의 개선

-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단계적 확대 실시
- 도로, 상하수도, 주거환경, 문화서비스시설 확충
- 전국의 면단위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
- 농어촌의 교육·의료시설 확충
- 농어촌지역 우수고교 육성
- 대학입시의 내신성적비를 상향조정 추진
- 기술계 고교 및 전문대학 등 농어촌지역 우선 확충
- 농어촌 의료전달체계의 내실화

3. 농업생산기반의 조기정비

가. 현황과 문제점

- 그동안 논농사 위주로 농업용수개발, 경지정리, 배수개선 등 실시
- 투자재원의 제약 등으로 충분한 개발이 미흡, 특히 전작분야 낙후
- 향후의 영농은 안정된 물관리와 기계이용이 없이는 불가능(개방화 대응에 중요한 취약요인)

○ 개선방향

- 농업용수개발은 단순한 농업용개발에서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을 복합지원하는 농어촌용수개발 체제로 전환·용수시설의 이용증가, 투자효율 확대

- 경지정리의 시행방법다양화로 모든 농장에 기계접근 가능화

- 용·배수체제의 개발로 답의 다목적 활용 가능화

- 중점적인 투자지원으로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 지원

○ 추진대상(잠정)

	사업별	대상면적	기추진	향후개발 상상면적
답	경지정리	760천ha	577	129
	배수개선	127	53	74
	용수개발	1,217	981	236
전	경지정리	100	0.2	99.8
	용수개발	100	23	77

○ 농지보전 및 이용제도의 개선

- 농민의 작목선택을 자유화(관상수만 신고제)

- 농가의 소득향상이나 생활편익을 위한 농지 전용 완화

- 우량농지보전과 농촌소득향상을 지원키 위한 농지보전방식 개선

4. 농산물수출의 적극적 개발

가. 주안점

○ 농산물시장의 자유화는 세계적인 환경변화

- 소극적 방어보다는 우위품목의 대외진출확대가 중요

○ 기술집중적인 한국적 자연특성 이용상품의 수출가능성이 큼.

나. 현황과 문제점

○ 농산물 수출기반의 취약

- 70년대 중반기이후 물가안정 우선으로 국내 농산물수출정책 소홀

○ 안정된 공급지속의 미흡

- 지속적인 수출시장확보 노력 보다는 단기적 가격마진 치중

○ 유통체계와 상품기술의 미흡

○ 식물검역 등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장벽

○ 개발수출 등 지원을 위한 수출손실의 직접보조 곤란

다. 대책방향

○ 수출유망작목의 발굴과 중점지원: 축산물, 과채류, 인삼 등

- 생산 및 상품화 기술개발과 유통지원 등 간접지원방식 개발활용

○ 농수산물 수출시장 정보기능강화: KOTRA 등

○ 농어민생산자단체의 수출참여확대: 「협동무역」(주) 등

○ 수출절차 간소화와 검역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교섭 강화

○ 안정된 물량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육성

○ 농산물 수출지원행정기능의 보강

○ 일본의 연간 농산물 수입: 164억\$

- 우리나라의 대일 농산물 수출은 3억\$ 수준에 불과

5. 농산물수입자유화 보완대책의 철저한 추진

○ 수입자유화로 직접 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 실시

- 차액보상: 관세상당치(T·E)와 연결운용

- 생산조정보상 : 폐원 등 희망농가에 잔재 예상소득 지원

- 작목전환지원 : 타작목 전환시 지원

→ 「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」에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

○ 수입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품종개발 등 다양한 대응책 발전

○ 지역집중품목은 지역경제특성에 따른 특수지원

〈예〉 지역개발조합지원 집중연구지도 등

6. 농산물수입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활용

○ 계절관세, 긴급관세 등 관세제도의 보완·운용

○ 반덤핑제소, 다량수입시 피해구제 등 활용

○ 농산물 및 식품수입에 대한 안전도 관리철저

- 수입농축산물의 검역기준과 시설확충

- 수입식품의 안전도 검사기준운용

7. 농어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강화

가. 현황

(1) 교육

○ 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(농림수산부)

- 영세민 자녀학자금 지원(보건사회부)

○ 대학생 기숙사 증설(문교부)

○ 농어촌지역 기술계 고교 및 전문학교(문교부)

○ 농어촌지역 우수고교 육성(문교부)

(2) 의료

○ 농어촌지역 의료보험(보건사회부)

○ 농어촌 영세민 의료 부조(보건사회부)

○ 농작업 상해 공제(농협)

○ 농작업 사고 보험(농림수산부)

(3) 재해

○ 풍수해 대책법(건설부)

○ 농어업 재해대책법(농림수산부)

○ 농작물 재해보험제도(농림수산부)

(4) 연금

○ 국민연금제도(보건사회부)

○ 농어민 연금제도(농림수산부)

나. 향후방향

- 복지제도 확충을 통하여 농어가의 소득보전 강화

○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확대

- 농어가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

- '91년에는 실업계고교 3년생 및 학력인정학교 학생으로 지원대상 확대

- 연차적으로 읍지역 농어가자녀에 대한 지원 단계적 추진

○ 농어민의 의료보험지원 강화

○ 농작물 재해 보상제도의 내실화

○ 농수산관련 보험제도의 보강

- 농작업 상해공제, 농작업 사고보험, 가축공제 등

○ 농어민 연금제의 도입 추진

- 국민연금제도와 연계 검토

8. 투자지원의 확대와 다양한 지원체계 개발

○ 농수산물 수입관세 등 농어촌 발전지원에 활용

○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농수산업의 능률화 촉진

진 